

주5일제와

도서관,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주5일근무제(이하 '주5일제')와 도서관'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도서관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가.

왜냐하면 지난해 9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이제까지는 자율적으로 실시해오던 주5일제가 앞으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제도가 되었으며, 그 시행 시점이 바로 2004년 7월이기 때문이다.

7월이라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도서관계의 논의는 과연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것일까.

우리 "도서관문화" 편집팀은 이번 4월호에서 "주5일제와 도서관"을 두고 우리 도서관계 현장에서 지난 몇 년간 무엇을 고민해왔으며 또한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 시도가 도서관계의 주5일제 대비 방안 마련의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편집자 주

1. 2004년 7월, 드디어 주5일제가 시작된다.

우리 사회전반에 주5일제를 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근로기준법"이 오랜 논란 끝에 지난 2003년 9월 개정되었다. 그 핵심 조항인 제49조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주5일제의 시행일은 2004년 7월부터 시작되어 최종 2011년까지는 사회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¹⁾고 동법 부칙에 명시되어 있다.

오래 전부터 주5일제 도입이 논의되어 왔던 중에 이미 은행들은 2002년 7월 전격 주5일제를 도입하였고, 그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도 자율적으로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주5일제가 전면 도입될 것이다. 특히 국민 실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은 주5일제 도입에 대비하여 2002년 4월부터 매월 1회 토요일에 시험휴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4년 7월부터는 이를 월 2회로 확대하고 2005년 7월부터는 모든 토요일을 휴무하는 지침²⁾이 지난해 연말 발표되었다.

1)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 “주5일제와 도서관” 관련 현장의 말! 말! 말!

“주5일제와 도서관”과 관련하여 제일 먼저 발표된 문건은 2001년 12월 10일 국립중앙도서관이 주5일제 도입에 대비한 도서관 운영 개선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주최한 도서관 협력방안 연구세미나에서의 《‘주5일 근무제’와 공공도서관의 운영방안》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구대 윤희윤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한국도서관협회 이용훈 기획부장이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 당시에는 대체로 도서관계는 ‘주5일제’를 반기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도서관 운영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³⁾ 도서관 직원도 근로자인데 왜 주5일제를 반기지 않는 것일까. 윤희윤 교수의 조사(대구지역 공공도서관 사서직원 40여명 대상)에 의하면 사서들은 주5일제로 인한 일반 국민의 근로시간의 단축은 도서관 및 자료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특히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자료 및 열람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주5일제가 확산되면 주말(토, 일요일) 도서관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고 당연히 남들이 모두 쉴 때 도서관 직원들은 지금보다도 더 바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초과수당 지급과 인력충원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직면할 것이고 그 결과는 도서관서비스 수준의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윤희윤 교수는 이미 주5일제를 시작한 외국의 사례 분석 결과 주5일제의 도입과 대출건수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인구 1천명당 공공도서관 방문자의 증감자수나 연간 증감율의 경우에도 큰 변화가 없음이 밝혀졌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5일제가 도서관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추락하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위상을 복원하는 호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그 이후 몇몇 모임에서는 ‘주5일제와 도서관’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⁴⁾ 그러나 현재 주5일제 확대를 앞두고도 도서관 현장에서는 늘어나는 휴일근무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이에 우리 도서관문화편집팀은 공식적인 도서관 현황 조사에 앞서 우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서들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⁵⁾ 위에서 언급했듯이 앞으로의 이야기는 대부분 공공도서관의 입장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와 같은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현재 ‘주5일제’와 관련하여 느끼고 있는 문제점은 과연 무엇이며 해결책은 있는지 등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자.

2) 행정기관 주5일근무제 도입관련 ‘04년도 토요휴무제 시행지침’(03. 12. 11.),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참조

3) 이러한 분위기가 도서관에 전 관종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난 4년간 ‘주5일제와 도서관’과 관련하여 발표된 문건들은 모두 공공도서관 운영방안에 관한 것이며, 올해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접수 결과 발언자의 70%가 공공도서관 소속이었으며, 우리 협회 산하 관종별 협의회 사무국과의 면담 결과 대학·전문·특수·학교도서관의 경우는 각 도서관이 속한 모(母)기관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서관장의 재량하에 운영되는 공공도서관과는 상당히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2001년 12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세미나가 개최된 이후 발표된 문건으로는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의 운영방안」(윤희윤, ‘도서관’, 제57권 1호, 2002. 3. 40~79쪽), ‘공공도서관의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연구」(서울시도서관연구회 행정분과위원회, ‘도서관연구’, 제19집, 2002. 12. 15~37쪽), 「공공도서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이용훈, ‘도서관연구’, 제19집, 2002. 12. 15~37쪽), 「주5일 근무제와 도서관」(권희식, ‘도서관연구’, 제19집, 2002. 12. 46~49쪽),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방안」(공공도서관협의회 특별연구위원 제1분과, ‘특별연구위원 연구결과’, 2002. 12. 1~24쪽)이 있다.

5) 우리 협회는 조만간 이 문제를 다룬 범 도서관계를 포함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황파악 및 대책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의견을 보내온 현장 사서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자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의 근무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도서관 근무자는 항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할 시간에 출근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바꿔 바꿔 바꿔봅시다.”(공공도서관 사서)

“일단 직원들은 모두 한결같이 특근비 필요없다. 쉬게 해달라. 우리도 공무원이다. 일반공무원이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공공도서관 사서)

“주5일제 밀어붙여야 합니다. 일요일은 모두 문을 닫읍시다. 왜? 직원들도 가족들과 함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양질의 서비스도 나오는 것입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서비스입니까. (공공도서관 사서)

“도서관은 주목적이 이용자애의 봉사에 있는 관계로 이용자가 많은 시간인 토,일요일 근무로 인한 딜레마에 빠져있다. 왜냐하면, 모든 개인적인 사회관계가 주말시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도서관직원들의 행복추구권도 무시할 수 없는 까닭이다.”(공공도서관 사서)

“전 직원이 토요일도 다섯시 일요일도 다섯시까지 근무하고 매주 월요일이 휴관이라 휴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직자는 일요일도 근무하고 월요일도 근무하고 있어 2주 동안 하루도 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서는 이렇게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공공도서관 사서)

“저는 공공도서관도 일요일 오픈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월화 등 지역별로 다르게 평일 순다는 의견도 있으나 어찌 직원 혼자만 쉬나요. 직원들도 다른 직의 사람들과 가족 친지들과 사회 생활을 해야지요. 불공평한 사서직 처우 아닌가요? 아니면 과잉충성 아닌지?”(대학도서관 사서)

“대민 봉사도 좋고 국민에게 책을 많이 읽히자는 취지도 좋습니다. 그러나 집안대소사나 모든 행사가 주말에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도 사람구실 좀 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토요일 근무는 차치하고라도 일요일만이라도 쉽시다.”(공공도서관 사서)

“희망사항은 전체 일요일은 휴관하고 토요일은 정상 개관한다.”(공공도서관 사서)

“요즘엔 이용자들이 월요일날 문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월요일 날 뭐든지 맘먹고 공부하고 싶고 시작하고 싶어하니까요”(공공도서관 사서)

“직원들과 토의 결과, 일주일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토요일은 이용자 대민서비스를 위해 도서관을 개관하고 일요일은 휴무해야한다는 의견이 주로 많이 나왔다. 지역주민들이 토요일은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공공도서관 사서)

“일요일 마저 반납하면서 일하기에는 너무 지쳐 있다. 평일 나흘로 쉬는 일은 이제 거부하고 싶다. 쉬는 날 다 같이 쉬고, 함께 나들이하는 평범한 일상을 원할 뿐이다.”(공공도서관 사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 휴관에 따른 도서관서비스 보완책>

- 무인대출, 반납 시스템 설치
 - 도난방지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전제 하에 대출·반납 업무를 중앙센터(예: 현재의 안내실)에 설치하고 필수요원만 근무
 - 인터넷, 특히 홈페이지를 통한 즉답(예: 채팅, 메신저 등) 정보제공 기능으로 근무형태를 변화
 -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토·일요일에 진행
- (출처 : 《공공도서관의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연구》, 도서관연구, Vol. 19, 2002)

이상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주5일제와 도서관'과 관련한 의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일요일은 휴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공개적으로 접근하면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일요일 휴관에 대한 발언이 인터넷 접수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5일제와 관련해서 최소한 일요일 휴관 문제는 현장의 절실한 요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인터넷 조사와 병행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을 필두로 전국 16개 지역대표도서관에 우선으로 도서관의 입장을 물었을 때는 일요일 휴관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하는 곳이 거의 없었다. '도서관'의 입장과 '근로자인 사서'로서의 입장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도서관인으로서의 숙명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온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주5일제가 시행되는 이 시점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희망을 찾을 수 없으리라는 절박한 단계에까지 온 듯하다.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서비스입니까."라는 한 공공도서관 사서의 말이 설사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 치부 할지라도 근무의욕 고취 없이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한편으로 다른 조사⁶⁾에 의하면 주5일제 도입 시 공공도서관의 토·일요일 근무방법에 대해서 2일간의 공휴 대체 보장, 특근수당 지급 등이 전제된다면 토·일요일도 근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전체 응답자의 50%에 달한다. 그러므로 토·일요일 근무방법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문제해결 방식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2002년 9월 서울시 22개 공공도서관 직원 1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 중 《공공도서관의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연구》, 도서관연구, Vol. 19., 2002, 27쪽 참조) 주5일제 도입 시 공공도서관의 토·일요일 근무방법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5일 근무제 도입 시 공공도서관의 토·일요일 휴무 방법

구 분	응답자수(명)	비율(%)
일반관공서와 같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토·일요일 모두 휴무)	30	27.5
일반 열람실만 개관한다.(토·일요일 모두 휴무)	18	16.5
현행처럼 토·일요일 근무하고 공휴대체(2일)를 준다.	27	24.8
현행처럼 토·일요일 근무하되, 토요일은 공휴대체, 일요일은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15	13.8
토·일요일은 러시아워 시간만 개관하고(예: 오전 11시~오후 3시), 근무자에게 특근수당을 지급한다.	9	8.3
기타	10	9.2
합계	109	100.0

재원 확보 불투명, 인력 충원과 서비스 개발은 그림의 떡?

그렇다면 도서관 인력, 예산,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을까. 도서관 직원도 주5일 근무를 하고 동시에 도서관 이용자도 기준에 받던 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으려면, 즉 도서관 개관시간의 축소가 없으려면 당연히 2교대를 해야 하고 이는 바로 인력 확보가 시급한 이유가 된다.

이미 국회도서관에서는 계약직 사서 제도(물론 전문직원 우선의 인력충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 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은 현재 공립공공 도서관에 약 4,6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최소의 추가적 인력소요 9.1%를 반영할 경우 약 422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정 사서직원 비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4,000여명의 추가 사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⁷⁾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 및 자치단체의 과감한 정책 결정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겠지만, 일정 업무의 아웃소싱 및 일반열람실 폐지도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 소속 한 도서관이 이번 주5일제 도입을 계기로 열람실을 폐지하고 도서관 본연의 정체성을 찾겠다고 하는 것처럼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또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열람실 폐쇄에 대한 대안>

- 지역 내 일정한 공간(동사무소, 마을회관, 청소년 시설 등)에 독서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
- 도서관을 독서실과 분리
- 도서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일반열람실을 자료열람실 안으로 흡수

(출처 : 《공공도서관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몇 가지 연구》, 도서관연구, Vol. 19, 2002)

“공공도서관의 현재 상황이 전 장서를 대출해주고 대출권수도 늘려주므로 꼭 도서관에 머무르는 시간이 장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on-line 상으로 e-book을 비롯하여 원문 DB서비스 e-learning 등의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공공도서관 사서)

또한 휴관일 교차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 윤희윤 교수는 《‘주5일 근무제’ 와 공공도서관의 운영방안》에서 광역자치단체의 휴관요일을 분석한 결과 서울, 대구, 인천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교대로 휴관하는 반면에 부산을 비롯한 13개 시도는 모두 월요일에 휴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도서관 중심 또는 행정편의적 사고와 관행은 어떤 명분과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인력 충원, 초과근무 수당 지급,⁸⁾ 서비스 개발 등의 문제는 결국 예산이 확보되

7) 《공공도서관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몇 가지 연구》(이용훈, 도서관연구, Vol. 19, 2002, 40쪽)

8) 2002년 12월 발표된 공공도서관협의회 특별연구위원회 결과보고인 《공공도서관행정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분석》 43~45쪽을 보면, 시간외수당을 전액 받는다고 한 사람은 설문 응답자 357명 중 196명으로 55%에 불과하다. 또한 과다한 시간외 근무에 급식까지 자비로 해결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서가 71%나 차지하고 있어 근무의욕 상실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지 않으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일로 현재 관계 당국은 인력 및 예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각 부처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원칙론만을 반복할 뿐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규정은 절대불변이다?

인력 충원과 서비스 개발 등이 재정 확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면 고정관념 깨기는 확고한 신념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도서관 개관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물론 현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근무시간에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10조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리 스스로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주저앉은 것은 아닌가 하고 반문해 볼 대목이다.

“우리 도서관은 평일에 자료실 개관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어 직장인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공공도서관 사서)

정확한 현황 조사를 기반으로 한 기본방향 제시 시급

우리 도서관 현장은 그 입장이 너무도 복잡 다양했다. 교육청 소속이 있고 지자체 소속이 있으며 게다가 민간 위탁된 곳도 있다.관장이 사서직이기로 하지만 행정직인 경우도 있다. 현업 부서도 있고 일반 부서도 있다. 3교대가 가능한 대규모 도서관이 있는가 하면 사서직원 1명이 이리 뛰고 저리 뛸는 그야말로 주5일제가 먼 나라 배부른 고민으로 들리는 도서관도 많다.

현재 일부 도서관에서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대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과도한 희생만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선 도서관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안과 함께 도서관계 전체의 통일된 입장과 대응도 준비되어야 한다.

‘관장 재량하에 주5일 근무 형태는 제 각각으로 시행되고 있다. 마지막 주 일요일 휴관하는 도서관이 있는 반면 개방하는 도서관도 있다. 해석도, 의견도 다 분분하다. 왜 우리는 공통화, 표준화를 가지지 못할까?’(공공도서관 사서)

‘관장이 바뀐 후 근무명령도 없이 주6일 근무를 강제로 시킴. 직원의 피로누적으로 눈치보기 및 각종 편법 근무가 행해지고 이미 기피부서가 됨. 관장은 주6일 근무를 강요하고 주중에 하루를 관내출장을 달고서 쉬라는 명령을 할 부분임.’(공공도서관 사서)

그러므로 도서관협회를 비롯한 우리 도서관계가 지금 당장 하루라도 빨리 착수해야 할 일은 도서관 현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도서관계의 통일된 입장 정리일 것이다. 개별 도서관이 처한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운영방안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위해서는 원칙 설정 또한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작업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새로운 공무원 복무 지침을 5월 말 경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전에 관계 부처에 우리 도서관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시민들에게도 도서관의 계획을 명확하게 전명해야 한다. 빨 빠른 대응마련에 도서관의 역량을 모을 때다.

4. 맷으며

이번 호 《“주5일제와 도서관”,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를 준비하면서 마련한 지상발언대에 도착한 의견을 접하고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은 현장 사서들의 사기 저하라는 문제였다. 직원이 그 직장을 사랑하지 않는데 도대체 외부의 어느 누가 그 직장을 아껴줄 수 있겠는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한 인재들의 기피로 인하여 도서관의 중요한 요소인 능력 있는 인재들이 들어왔다가도 바로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공공도서관 사서)

도서관이 공부방 역할 위주에서 탈피하여 진정 21세기 지식강국의 문화인프라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로 무장한 건물과 다양한 매체로 수집되는 자료도 중요하지만 수준 높은 도서관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진정 도서관이 근무하고 싶은 곳, 사서직이 신이 나서 일할 수 있는 곳이 되어 도서관이 제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우리 사서들은 도서관이란 결국 지역 주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존립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설령 ‘주5일제와 도서관’을 둘러싼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급변하는 이 시대에 지역주민이 도서관을 외면하면 위탁관리나 명칭 변경에 대한 반론, 인적 및 물적 지원의 필요성, 정보센터로서의 존재가치 등을 주장할 명분이 없다. 즉 전문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사서들의 사고 및 안목이 확장되지 않으면, 교육 및 문화정책의 조류와 파장을 해명하지 못하면, 정보기술과 여가생활의 변화추이를 자료이용에 접목시키지 못하면, 무슨 재주로 존립기반을 강화할 것인가. 도서관이 존재해야 주5일제에 대해 당당하게 휴일 휴관을 주장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도서관 직원의 행복” 사이에서 적절한 절충점을 찾아내는 이 어려운 문제를 더 이상 미루어 둘 수는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이 현재 우리의 문제이다. [글: 도서관문화편집팀, 대표집필: 박경아 기획 · 홍보팀장]